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저축상품인 연금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인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찍 가입하여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계좌에 대한 세법상의 특징을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손에 쥐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똑똑하게 활용하자

글 · 현명훈 선임연구원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연금계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설령 연금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의 마케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정부의 홍보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라는 말을 가끔은 들어 봤을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이 된 연금계좌,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노후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세무적 관점에서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계좌란 무엇인가?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될 연금계좌는 세법상 퇴직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함에 따라 설정되는 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¹⁾. 연금저축계좌는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도 퇴직연금계좌에 해당됩니다.



DC 계좌에는 가입자의 퇴직금이 매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입되고, IRP 계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입금되거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에 보태기 위해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 입출금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면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IRP의 납입한도를 연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총납입액의 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하여 적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공제율은 지방세 포함 13.2%)가 주어지는데 그 혜택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 소득 원천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률!

노후자금을 불리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출할 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떼이는 세금이 많다면 손에 쥐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에는 인출 방법과 소득 원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 원천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 가입자 개인이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과 그 운용손익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C계좌에 매년 납입되는 사용자(재직 회사) 부담금뿐만 아니라 그 운용수익까지 퇴직소득이 되며, 이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인출하든지 일시금으로 인출하든지 다른 소득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이것은 다른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소득비례공제,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실제 퇴직금의 실효세율은 대개 3~7% 정도로 낮습니다.

반면, 세제혜택을 받은 자기 부담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과 연금 형태(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3.3%~5.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은 그 인출 사유에 따라 13.2%~16.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표1]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별 과세율

구분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소득	자기 부담금 (세액공제분) + 자기 부담금의 운용소득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	연금소득세 3.3% ~ 5.5% (연령, 연금 형태에 따라 세율 상이함)
연금 외 수령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일반적인 인출 시 16.5%,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출 시 13.2%)

주: 세율은 지방세 포함
자료: 소득세법

3.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 사용자 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운용수익의 원천이 사용자 부담금인지 자기 부담금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인출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등 복수의 계좌를 갖고 있고, 위험은 줄이면서 기대수익을 높이기 위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사용자 부담금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대수익을 높이하고자 한다면 매년 DC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사용자 부담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사용자 부담금과 가입자 개인 부담금이 매년 400만 원씩 납입되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투자 원금(400만 원)을 갖고 한쪽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다른 한쪽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할 때, 두 계좌를 합해 동일한 수익을 내더라도 각 계좌의 활용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 기본 가정

- 부담금 납입 : 각 10년, 20년, 30년 납입(연말 납입)
- 사용자 부담금 : 400만 원, 가입자 부담금 : 400만 원
* 사용자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의 납입 원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상승률을 0%로 가정
- 운용 수익률
- 적극적인 투자의 기대수익률 연 7%, 안정적인 투자의 기대수익률 연 3%
- 근속연수 : 10년, 20년, 30년 가정(2013년 이후 입사)
- 자기 부담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연금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음(연금저축계좌(펀드)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별도의 관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표2] 소득 원천별 운용수익의 세후 수령액 차이

(단위 : 원)

구분		사용자 부담금 적극적 운용 + 자기 부담금 안정적 운용 (A)	사용자 부담금 안정적 운용 + 자기 부담금 적극적 운용 (B)	차이 (A-B)
투자기간 10년	운용수익(세전)	21,121,309		
	운용수익(세후)	19,482,454	18,404,286	1,078,168
	실효세율	7.8%	12.9%	-5.1%
투자기간 20년	운용수익(세전)	111,463,467		
	운용수익(세후)	102,062,542	96,607,051	5,455,490
	실효세율	8.4%	13.3%	-4.9%
투자기간 30년	운용수익(세전)	328,144,808		
	운용수익(세후)	298,585,101	282,736,978	15,848,123
	실효세율	9.0%	13.8%	-4.8%

주: 인출 형태는 일시금이며, 기타소득의 세율은 16.5% 적용(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인출)
자료: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예시 결과에서 보듯, 적립금을 분산 투자할 때 사용자 부담금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세후 수령액을 많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수익은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자기 부담금의 운용수익은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전 수익이 동일하더라도 사용자 부담금 쪽의 운용수익이 많은 게 실질 수령액이 더 큼니다. 예시에서는 세율을 4.8%~5.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퇴직소득의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지면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과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 차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부담금 운용수익(퇴직소득에 해당)에 적용되는 과세율이 자기 부담금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것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율 4.8% ~ 5.1% ↓	세율 0 ~ 2.2% ↓
일시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주1: 일시금 수령에 따른 세율 변화는 납입금액, 운용수익률, 투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2: 연금 수령 시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수익(이연퇴직소득)이 먼저 인출(세율은 3.3%)되어 소진된 후 세제혜택을 받은 자기 부담금과 여기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인출(세율은 3.3% ~ 5.5%)됩니다.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사용자 부담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도인출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

연금계좌는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긴급적이면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한 일로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입출금이 유연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지하지 않더라도 경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²⁾.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출됩니다. 먼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과세 없이 인출되며, 이 금액이 다 소진된 후에는 퇴직금이 인출(계좌에 퇴직금이 있는 경우)됩니다. 그다음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DC 계좌에서는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재직기간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IRP 계좌에서는 해지하거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퇴직연금계좌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5. 의료비 인출은 연금계좌를 이용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이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text{연금 수령 한도} = \text{연금계좌 평가액} * / (11 - \text{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 연금계좌 평가기준일 : 연금 수령 신청일

이러한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³⁾. 하지만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한 것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와 의료비 확인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목적의 인출금액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는 계좌는 가입자가 보유한 복수의 연금계좌 중 1계좌로 한정됩니다.

2) 2013년 세법이 개정되기 전 구(舊) 연금저축에서는 해지하기 전에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3)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그 인출금의 원천이 이연퇴직소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계좌의 통합 관리가 필요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는 계좌의 성격이 다를 뿐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라는 점에 있어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인출에 대한 과세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도 적립에서부터 인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금 계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계좌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과세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을 재직기간 동안 가능한 한 크게 불리고, 자기 부담금 또한 꾸준히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부족한 노후자금도 마련하는 이중의 연금 장치가 뒷받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友

